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정책기획국 (담당 : 정세윤 국장 02-723-0808 pp@pspd.org)
제 목 [성명]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실체 없는 의혹제기,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경계한다.
날 짜 2020. 05. 13. (총 2 쪽)

성명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실체 없는 의혹 제기,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 훼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경계한다

1.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묻지마식 의혹제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일부 언론들의 악의적인 의혹제기와 아니면 말고 식의 보도가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로 쏟아지고 있다. 이들은 기사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단체 활동 내용에는 아랑곳없이 오로지 피해자 지원이 모든 것인양 주장하거나, 제도적 미비함이나 사실관계 확인으로 해명될 수 있는 것도 마치 숨겨진 문제가 있는 것처럼 침소봉대하고 있다. 2015년 문제의 한일 합의에 대해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여부조차 의혹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2. 우리는 이러한 실체 없는 의혹제기가 정의기억연대 활동에 흠집을 내는 것은 물론 2015년 한일간의 졸속 합의를 정당화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경계한다. 놀랍게도 일부 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싣거나, 2015년 합의가 외교적폐로 낙인찍힌 것을 비판하고, 진상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2017년 외교부가 구성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는 박근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핵심내용을 피해자 측에 알리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지만, 일부 언론은 이마저도 왜곡보도하고 있다. 일부 언론의 의도가 무엇인지 읽히는 대목이다.
3. 참여연대는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부당한 공격은 중단되어야 하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을 과거로 되돌리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한다. 주지하듯이 이 운동은 우리 사회가 미처 알지 못했거나 알고서도 침묵했던 그 부끄러운

시절, 김학순 할머니 등 피해자들의 외침으로부터 시작되어 지난 30년 동안 끈질기게 이어져왔다. 최초의 외침이었던 일본의 진정한 반성과 사죄가 여전히 ‘위안부’ 문제 해결의 첫번째 조건임을 한국 시민사회가 인식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2015년 합의를 미리 알았다 한들, 당시 박근혜 정부의 졸속 합의가 할머니들과 시민들을 다시 추운 거리로 불러낼 수밖에 없었던 부끄러운 합의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4.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에 대한 평가가 같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이런 식의 무차별적이고 집단적인 의혹제기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일이다. 지난 30년 동안 ‘위안부’ 문제를 세계사적인 여성 평화운동으로 일궈온 피해자와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폄훼해서도 안 될 일이다. 우리는 일본 정부가 여전히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한,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의 활동은 지속되어야 하며, 그 운동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 시민사회의 몫임을 분명히 한다. 그 길에 참여연대도 함께 할 것이다.
끝.